

## 민법(친족상속법제외)<필수>

### 2012년 시행 5급[행정] 공채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甲은 상가건물 X의 소유자로서 乙에게 이를 임대해 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관련 서류 모두를 교부하였다. 마침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으려던 乙은 이를 기화로 甲에게서 넘겨받은 서류를 丙에게 제시하고, X 건물에 대하여 甲의 이름으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. (총 40점)

- 1) 甲이 丙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가? (10점)
- 2) 1)의 말소청구에 대하여 丙이 乙의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? (30점)

제 2 문. X 건물에 대하여 甲은 1/2 지분, 乙과 丙은 각 1/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, 乙은 甲과 丙의 동의 없이 X 건물의 보수와 개량을 위하여 丁과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. 현재 丁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지만, 乙은 약정한 공사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. (총 30점)

- 1) 丁은 甲에 대하여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? (14점)
- 2) 위 공사로 인하여 X 건물의 가치는 1억 원 정도 상승하였다. 丁은 甲에 대하여 이 가치증가분 중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? (16점)

제 3 문. 甲은 A 건설회사가 신축·분양하는 X 아파트를 친구인 乙 명의로 분양받기로 하고 乙의 승낙을 얻어, 1993. 11. 23. 분양명의자를 乙로 하여 乙이 A 회사로부터 X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. 甲은 이에 따라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1994. 6. 25. X 아파트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그 무렵부터 X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. 甲은 2010. 6. 17. 乙을 상대로 X 아파트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. 甲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? (30점)

##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장